

보도시점 2026. 7. 29.(수) 16:00 배포 2026. 7. 29.(수) 14:00

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전략자문회의」 개최

- 일반국민 및 청년층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점검
- 설문조사로 나타난 국민 인식 등을 토대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핵심과제 발굴 방향에 대한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29.(수) 서울 정동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미래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미래전략자문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7.29.(수) 15시 /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 (주관부처) 기획예산처 : 장관(주재), 미래전략기획실장,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국민소통단 부단장 등
- (전문가)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호기 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 구인회 서울대 교수, 최재영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장, 유민영 플랫폼 9와4분의3 대표, 백우열 연세대 교수,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

이번 회의는 일반국민과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반이 될 대한민국 대개조 핵심과제 발굴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반국민 · 청년층 설문조사 결과]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과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26.6.23일부터 6.29일까지 7일간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① 현재 인식 - 주거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인식, 청년은 일자리 문제도 중시

먼저, 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일반국민(25.7%)과 청년층(27.8%) 모두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꼽으며, 주거 안정이 국민 공통의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에서 세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반국민은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응답(24.0%)하며 안정적인 삶의 기반 확보를 중시한 반면, 청년층은 ‘일자리 및 사업 불안정’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응답(36.4%)하는 등 주거 문제와 함께 고용·경제적 기반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미래 전망 - 국민 상당수, 미래 불확실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선택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및 청년층 상당수가 20년 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별 응답비중: (일반국민) 악화(43.6%), 비슷한 수준(27.5%), 개선(28.9%)
(청년층) 악화(61.6%), 비슷한 수준(25.8%), 개선(12.6%)

한편,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의 변화를 좌우할 핵심 불확실 요인으로 일반국민(47.8%)과 청년층(43.8%) 모두 ‘인구구조 변화’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이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중장기 정책수요 - 안정과 기회 확대를 둘러싼 세대별 정책 수요 차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국민 삶의 안정 및 행복 증진’(27.2%)을, 청년층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31.6%)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이는 일반국민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 마련을, 청년층은 새로운 기회 창출과 성장 기반 확보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분야별 중장기 중점과제 측면에서도 이러한 세대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기술·산업 분야에서 일반국민은 ‘산업 간 격차 완화 및 동반 성장 환경 마련’(35.5%)을, 청년층은 ‘실패를 용인하는 R&D 지원 확대’(34.6%)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일반국민이 ‘사회안전망 강화’(33.2%)를, 청년층은 ‘신규 일자리 창출’(31.4%)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는 일반국민은 변화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청년층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회 확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주요 논의 내용]

이날 회의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미래 대응방향에 대한 각 분야 민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인구감소, AI대전환,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전략의 골자가 될 대한민국 대개조 핵심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 전략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이 함께 담길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일반국민, 특히 청년 등 다음세대의 기대와 우려를 바탕으로 20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차근차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심층 논의 등 국민 참여 기반의 열린 논의구조를 기반으로 대개조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국민소통단	책임자	국 장	이성원 (044-214-1603)
		담당자	사무관	김유현 (janes0425@korea.kr)
			사무관	김채윤 (cy901@korea.kr)

1. 조사개요

① (대상) 일반국민 성인 남녀 1,000명(만 19세~), 청년 500명(만 19~34세)

② (기간) '26.6.23~6.29, 7일간 조사

③ (조사방법) 통신사 가입자를 활용한 웹서베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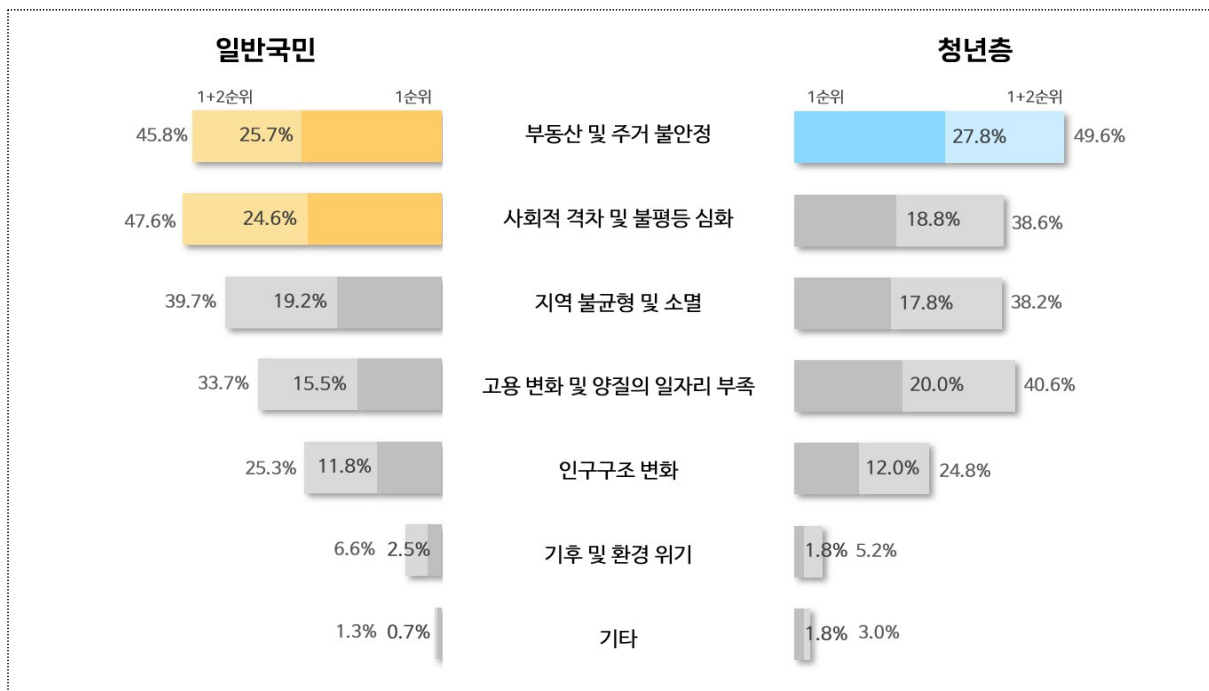
※ (설문문항 구성) 서베이 전문가 자문 및 작업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성

2.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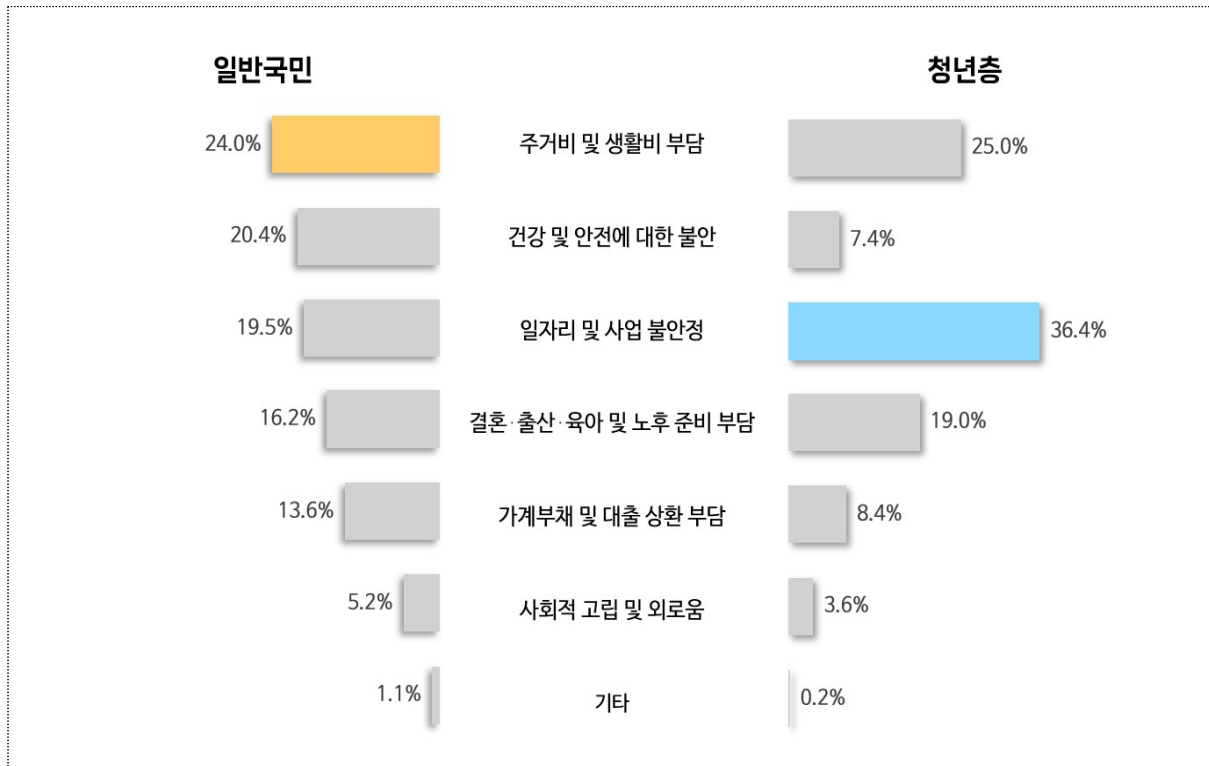
(1) 현재·미래 상황 분석과 미래비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① (현재 당면한 문제) 일반국민과 청년층 모두 '부동산·주거 불안정'을 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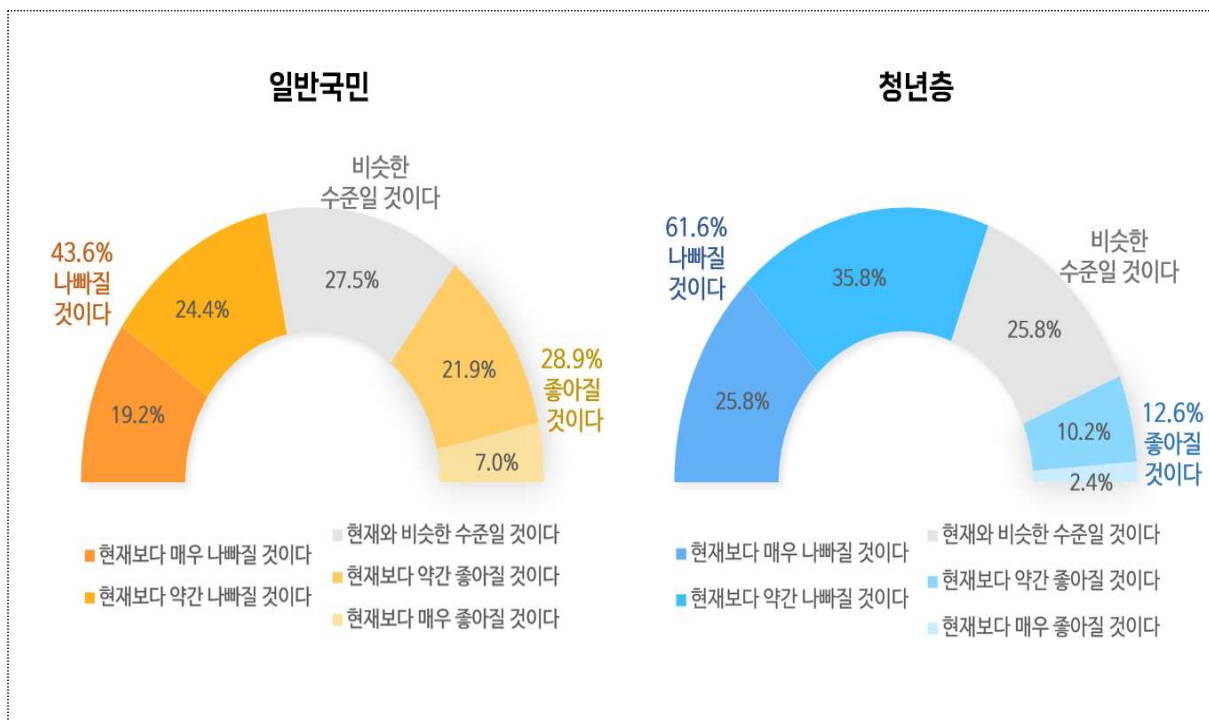
○ 한편, 청년층은 '고용변화·양질 일자리 부족'도 주요 과제로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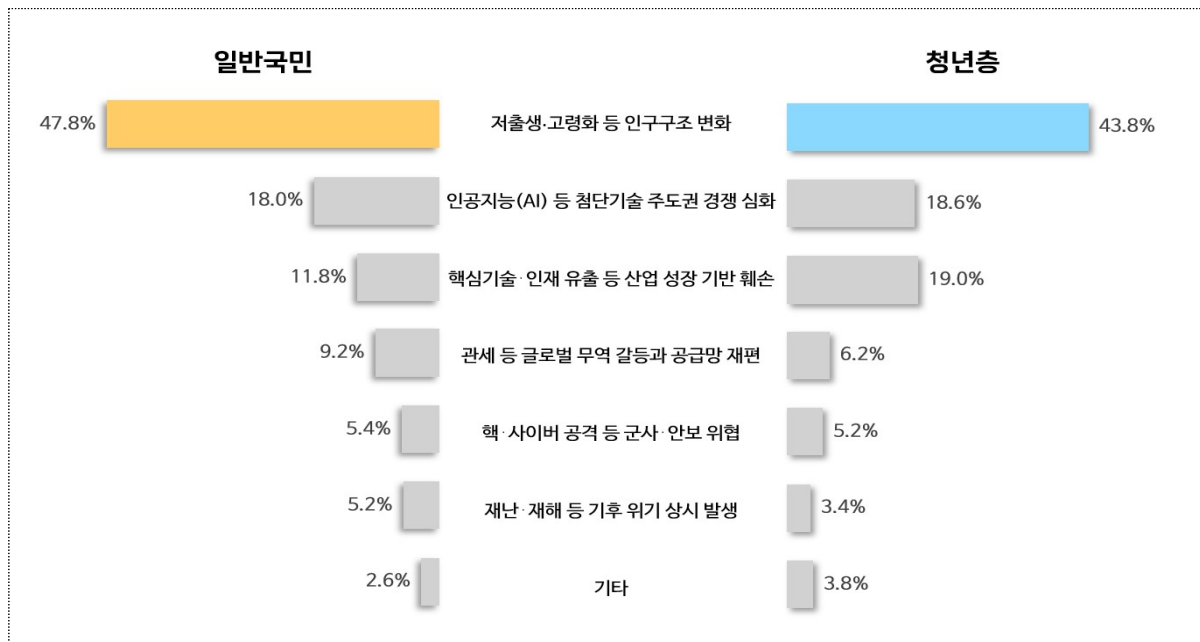
② (불안 요인) 일반국민은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을, 청년층은 ‘일자리 및 사업 불안정’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응답



③ (미래 전망) 일반국민 및 청년층 상당수는 20년 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회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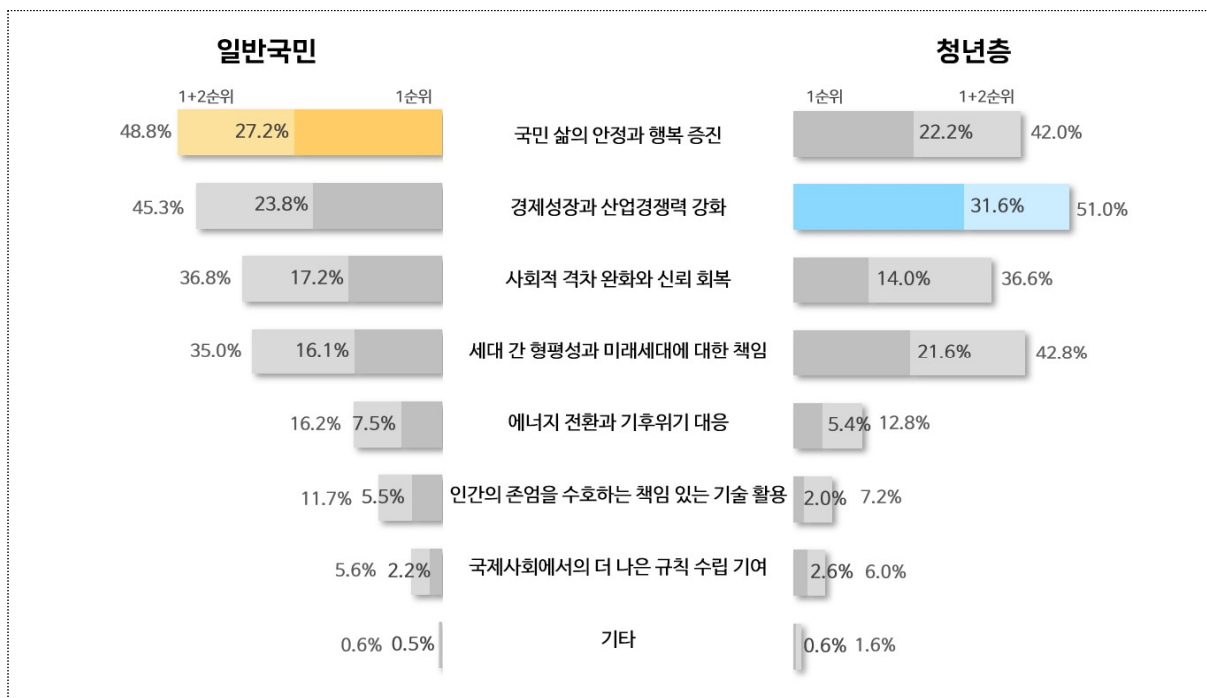


④ (미래 불확실 요인) 일반국민·청년층 모두 향후 20년간 경제·사회 변화를 좌우할 핵심 불확실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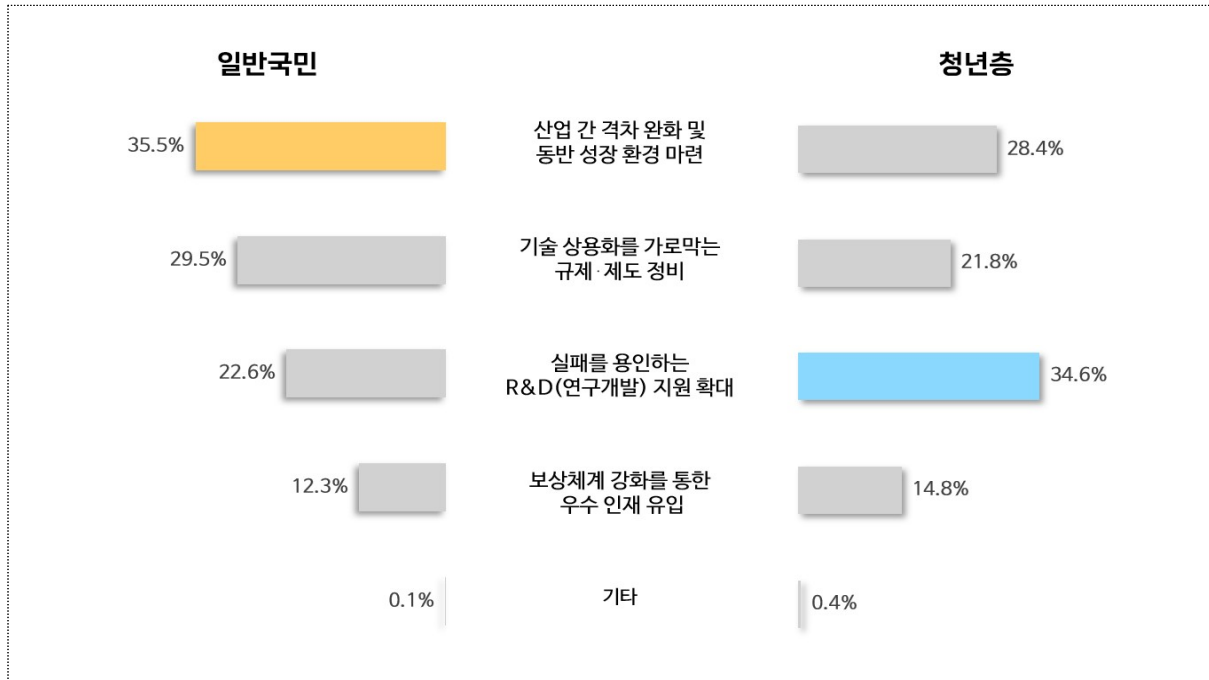
⑤ (미래비전 관련 핵심 가치) 일반국민은 ‘국민 삶의 안정 및 행복 증진’을 중장기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로 평가

- 반면, 청년층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꼽으며, 다음세대 기회 확대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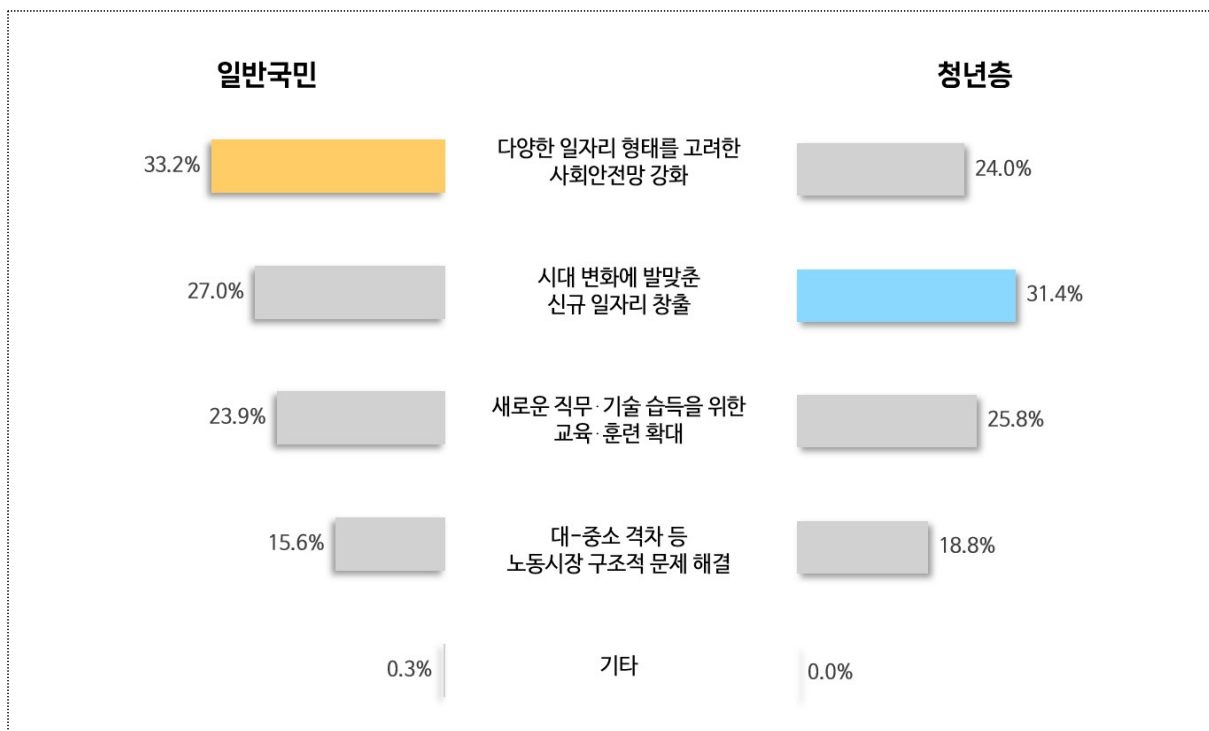


(2) 주요 분야별 중점 대응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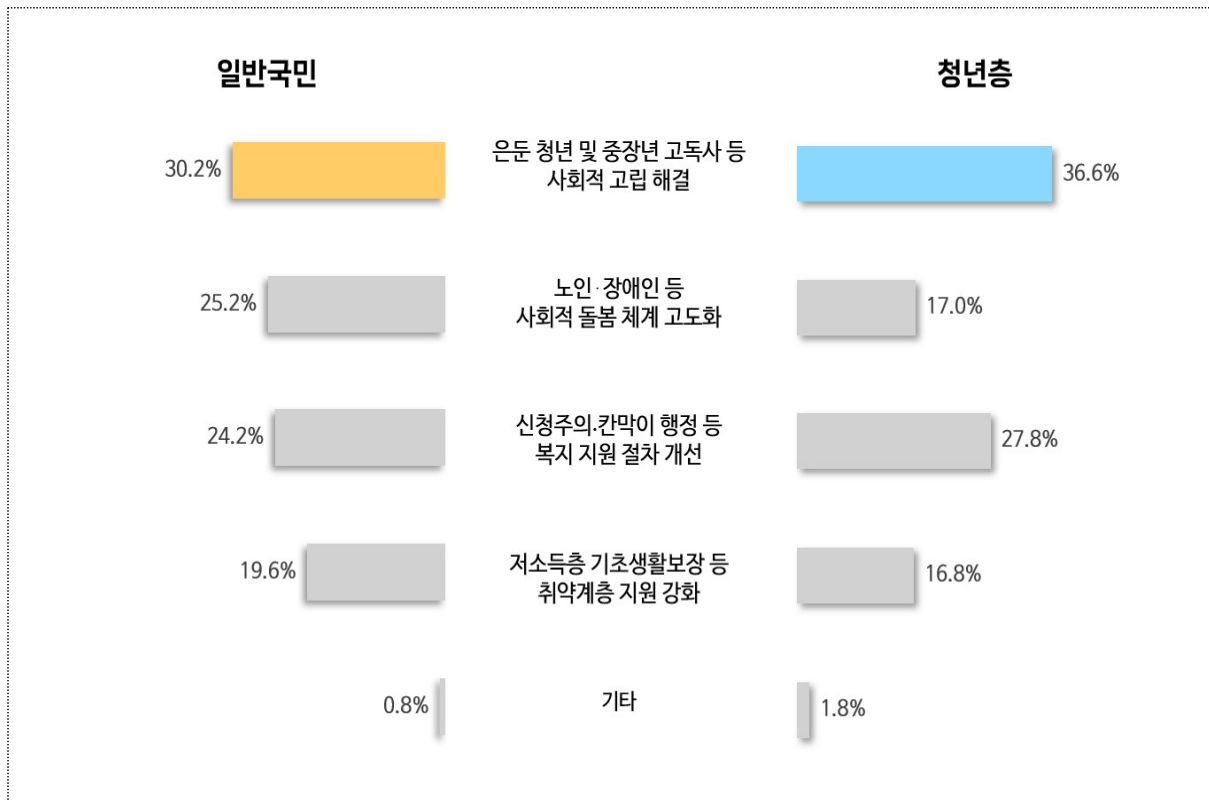
- ① (기술·산업) 일반국민은 ‘산업 간 격차 완화, 동반성장 환경 마련’을, 청년층은 ‘실패 용인형 R&D 지원 확대’를 주요 혁신 과제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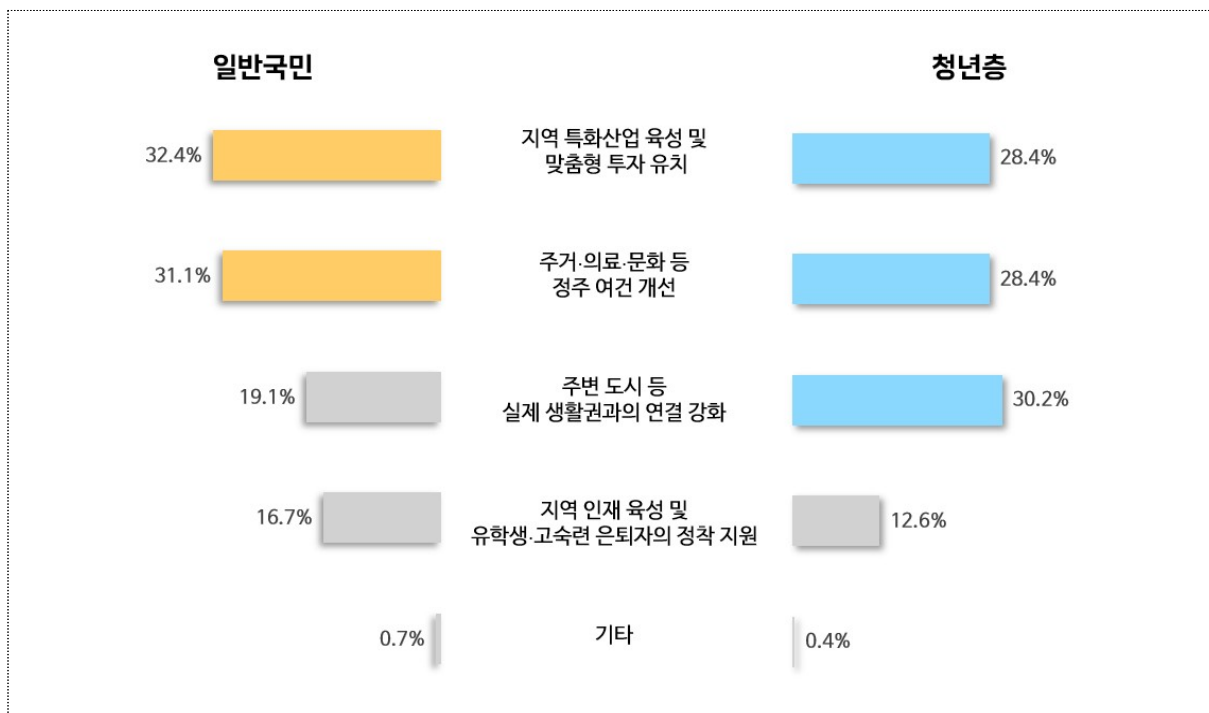
- ② (일자리) 일반국민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청년층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미래 노동시장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



③ (복지) 일반국민과 청년층 모두 ‘은둔 청년 및 중장년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해결’을 복지 분야의 주요 과제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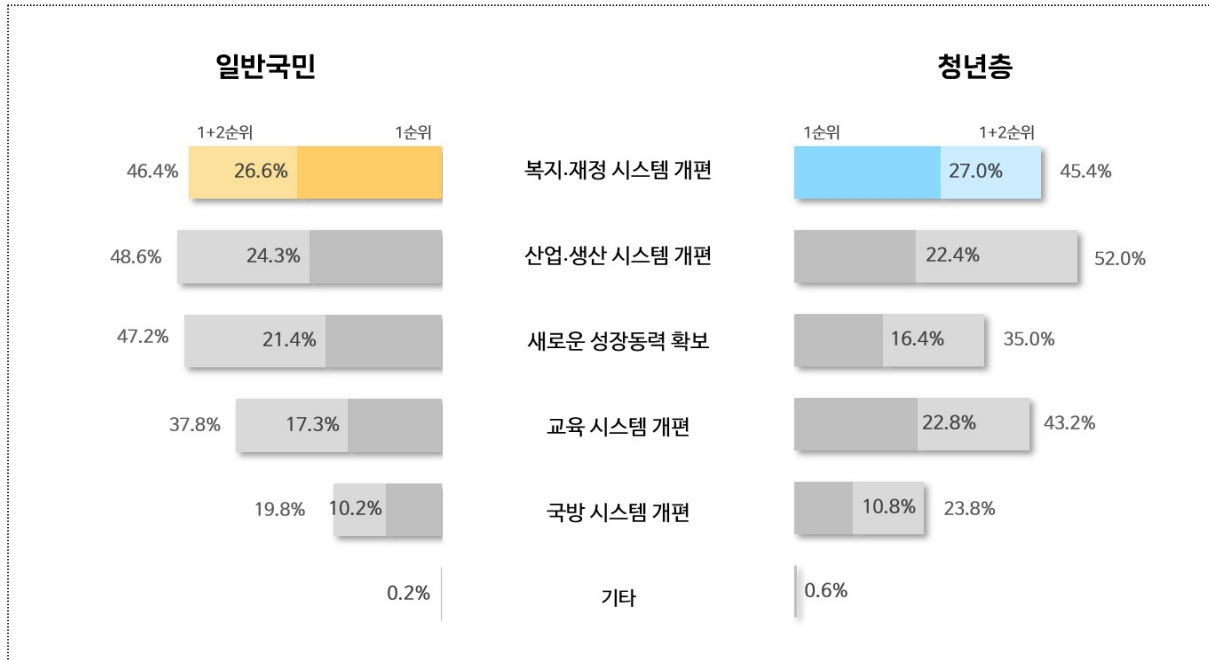
④ (지역균형) 일반국민은 ‘지역 특화산업·맞춤형 투자 유치’를, 청년층은 ‘실생활권과 연결 강화’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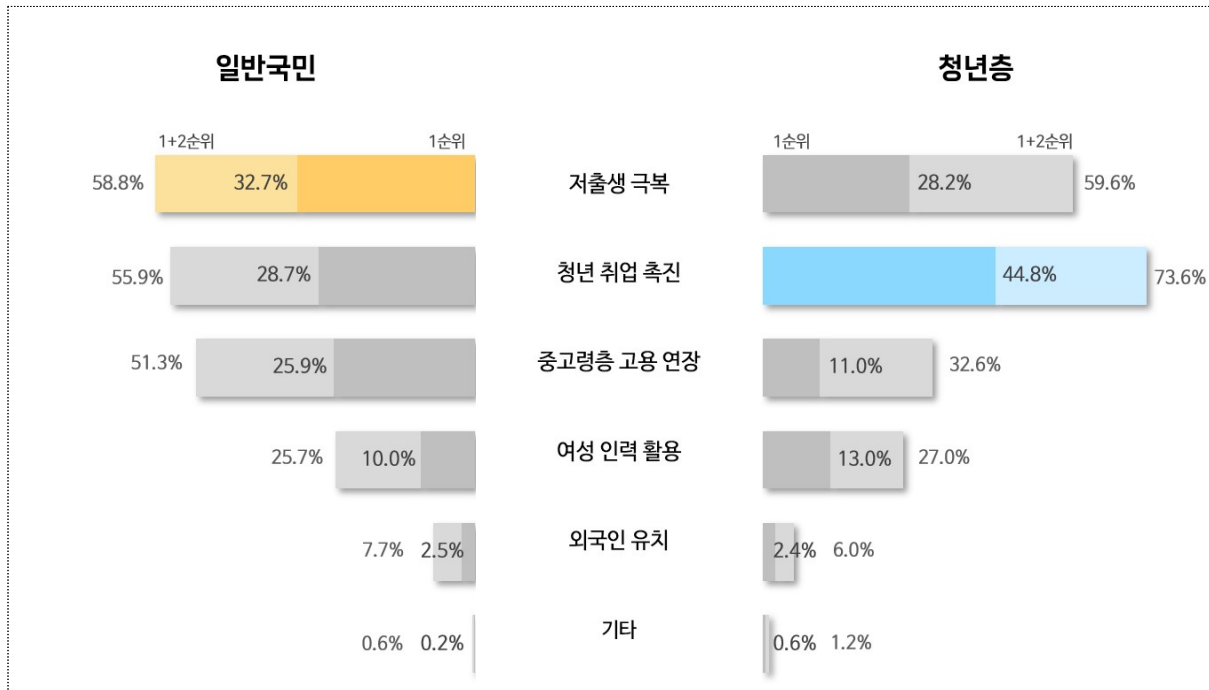
⑤ (인구) 일반국민·청년층 모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적 대응’ (출산율·인력 제고)보다 ‘현실적 대응’(인구감소 적응)이 적합하다고 인식

* (일반국민) 현실적 대응 57.3% ↔ 적극적 대응 42.7%
(청년층) 현실적 대응 63.8% ↔ 적극적 대응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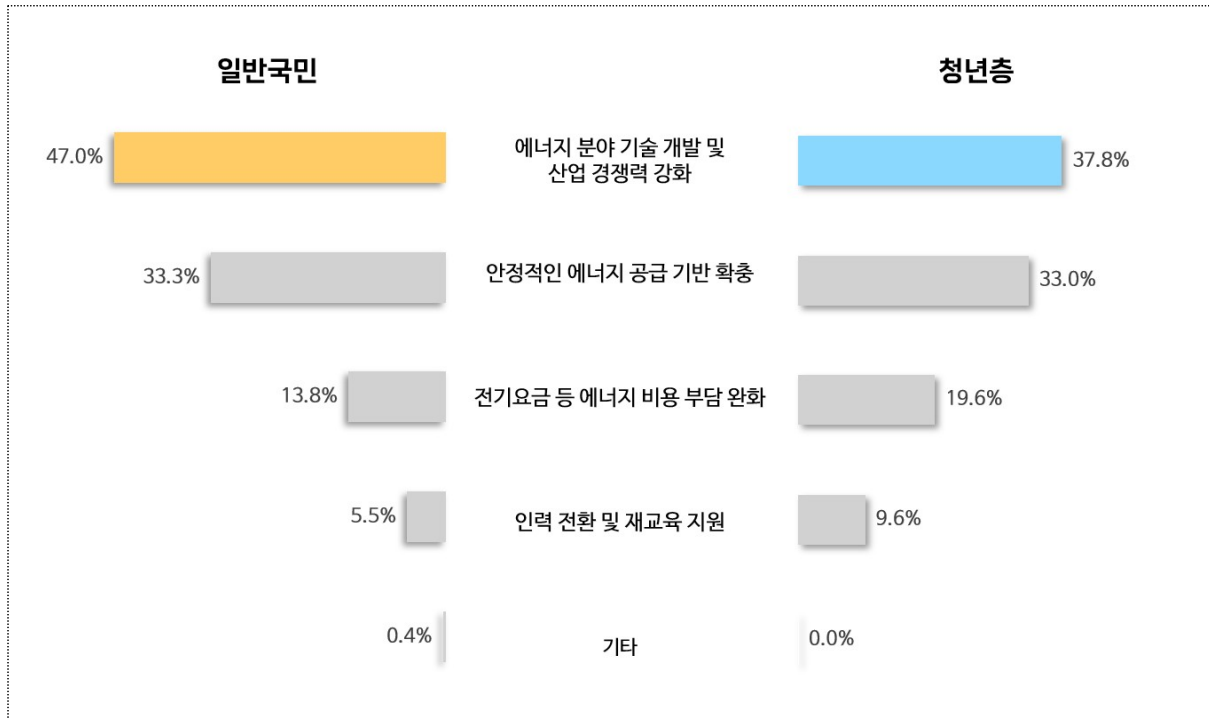
- 현실적 대응 측면에서는, 일반국민과 청년층 모두 ‘복지·재정 시스템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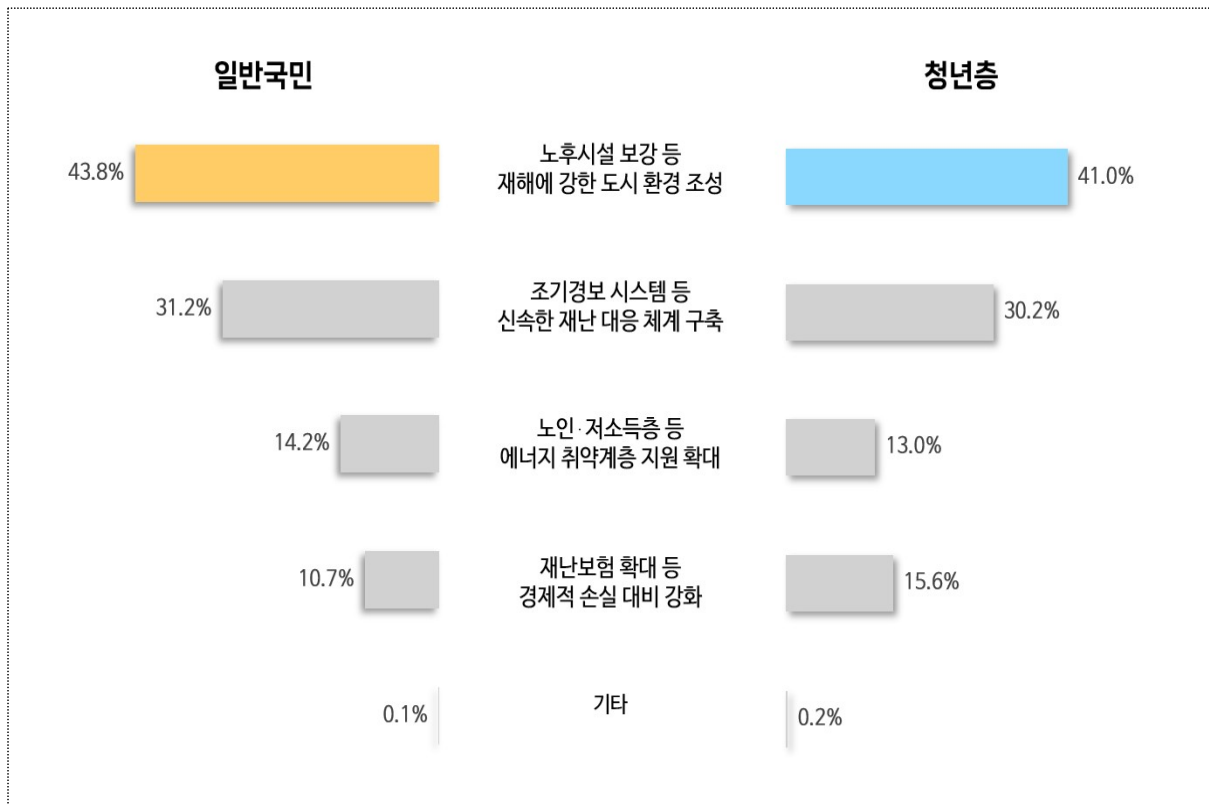
- 적극적 대응 측면에서는 일반국민은 ‘저출생 극복’, 청년층은 ‘청년 취업 촉진’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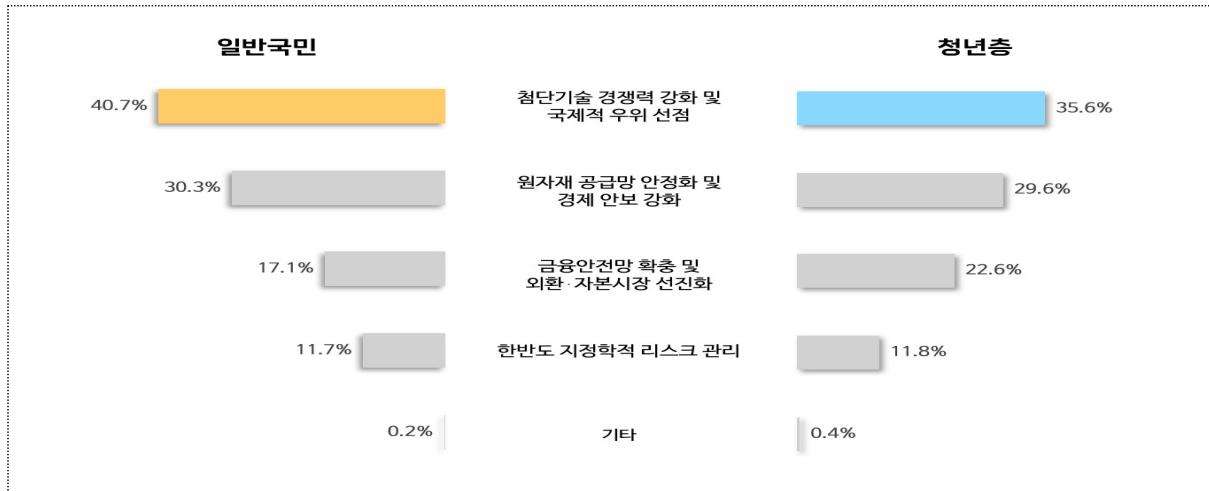
⑥ (에너지) 일반국민·청년층 모두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



⑦ (기후위기) 일반국민과 청년층 모두 ‘노후시설 보강 등 재해에 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핵심과제로 평가



⑧ (평화·안보·통상) 일반국민·청년층 모두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우위 선점’을 급변하는 대외환경 대응의 중점과제로 지목



⑨ (재정·구조) 두 집단 모두 중장기 재정투입 분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재정혁신 과제로 ‘예산 활용 투명성 제고·성과관리’를 지목

